TALK '사이버 검열' 논란 일파만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사찰…'개인정보보호'가 무색하다

'사생활 보호가 우선인가, 공권력 집행이 우선인가'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톡 운영사인 다음카카오 측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잇따르자 해당 기업이 반발한데 이어 국감에서도 사이버 검열 내지는 사찰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4면〉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무분별한 사생활 감시에 대해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는 한편 다음카카오 측의 대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집단 사이버 망명 사태에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80년대 보도지침 능가하는 공안정치" 국감장 핫 이슈

◇'다음카카오' 반발=카카오톡 운영사인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감청을 우려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자 카카오톡 운영사 측이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청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일반 영장 집행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핫 이슈로 부상=다음카카오 측의 반발과 집단 사이버망명 사태는 급기야 국감의 핵으로 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 등으로 불거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문제를 국감장의 핫 이슈로 끌어올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디지털 증거 복원 장비가 최근 한 달 반 사이 64억원 어치나 구입됐고, 인터넷 감청 설비는 지난 10년동안 9대에서 80대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메일,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해 61%나 증가한 점과 함께 경찰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까지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생활 VS 공권력…누리꾼 반응=수사기관의 사찰 논란과 다음카카오 측의 입장 발표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수사기관의 도 넘은 사생활 엿보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또 다음카카오 측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다음카카오 측이 그동안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 놓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의 잘못이라는 식의 입장 표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샤우×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이용자는 "카톡은 장비가 없어서 감청을 못한다고 주장해 왔었지요. 카카오톡 탈퇴가 급증하자 다음카카오 대표가 나서서 앞으로 정부가 감청 영장을 들고와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레인××'는 "카카오톡 뿐이 아니었다. 네이버의 밴드도,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앱도 털리고, 이메일이야 공개일기 수준일 테고, 이통사는 말할 것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다. 전방위로 마음만 먹으면 사찰할 수 있는 사회, 빅시스터(브라더)의 사회다"라고 수사기관의 도 넘은 사생활 침해를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톨릭, 동성애·이혼 포용 시사

예비보고서 공개 파장

가톨릭 교회가 동성애와 이혼을 포용하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기존의 교리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와 이혼, 피임 등 엄격히 금해온 사안에 폭넓게 문을 열겠다는 것이어서 최종 보고서의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는 13일(현지시각) 공개한 12쪽 분량의 예비보고서에서 교회가 동성애자와 이혼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물론 이들의 아이들도 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은 세계 각지의 주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부터 바티칸에서 시노드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19일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띤다.

보고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교리는 유지하되 동성애자에게도 은사(恩賜·gift)가 있으며 이들 사이에 희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돕는 사례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세속적 결혼과 동거의 긍정적 면모를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임에 대해서도 신자 상당수가 교회의 금지방침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유화적 입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번 회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이혼 및 재혼 신자의 영성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주교들의 의견이 갈렸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AP는 "결혼과 이혼, 동성애, 피임과 같은 중대 사안들에 대한 이번 보고서의 어조는 거의 혁명적 수용"이라며 "동성애를 2천년간 죄악시해온 가톨릭에서 이같은 문제제기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보고서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면서 교황이 주교 시노드 지도부에 보수인사들이 선출되자 지난 10일 6명의 진보파를 긴급 투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 개청식이 14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강인규 나주시장, 유성엽·신정훈·김승남·최규성 국회의원, 유관 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남도 제공〉

16개 공공기관중 9번째 둥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14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1968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농업토목시험소'로 자리잡은 이후 47년 만에 첫 이전이다. 직원 732명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 중 9번째 입주로, 신청사는 부지 11만5000㎡, 건축 연면적 4만2000㎡,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유성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신정훈·김승남·최규성 국회의원,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혁신도시 입주 기관장,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장 및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시아문화개발원장에 최종만 광주상의 부회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아시아문화개발원장에 최종만(58·사진)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임명했다.

최종만 신임원장은 오는 2015년 9월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공연·전시, 운영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문화전당 개관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최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센슈대학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사무차장과 광주시 동구청장, 광주시 문화산업국장,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부 산하 특수목적법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10년간 나무 1억그루 심는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민선 6기 전남 브랜드의 하나로 '숲'을 강조한 가운데 전남도가 '숲 속의 전남'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나무 1억 그루를 심기로 했다. 나무심기는 민간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진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0만 그루씩 나무 1억 그루를 심는다. 10년간 나무 심는데는 모두 5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예산은 500억원 정도로, 앞으로 국비와 지방비 7대3의 비율로 배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숲 속의 전남 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에는 '숲 속의 전남 민간추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민간추진위원회를 지원할 근거를 담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으로, 민간주도로 전개되는 '내 집앞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도 후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숲 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을 만들고 싶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제 임기 중에 완성하지 않고 제 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의 고민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시장논리 아닌 낙후도·균형발전 고려를

'영호남 상생' 1면에서 계속

천 전 장관은 이어 "신지역분권론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고도 성장 과정에서 호남 배제를 벌충할 수 있는 정치적·정책적 결단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도 "지역격차를 논의하되 호남의 낙후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줘야 한다"며 "시장논리로 경제성과 인구수만 따지지 말고 낙후도와 균형발전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에 대한 좀더 큰 정책적 결단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매일신문 편집국장은 "젊은 세대 일부가 영호남 갈등을 확산하려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완화하고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제 갈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 때문에 폭발 직전이다"고 말했다.

세대갈등과 관련,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지금도 세대갈등은 심각하고 시간이 가면 더 심화할 것"이라며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 중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